

동반성장과 한국경제

정운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2016.05.27.

I.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I.1 한국사회의 위기와 기회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다. 빠른 산업화와 높은 경제성장을 이뤄냈고 민주화를 통해 독재와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였다. 그러나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진 성공은 미완의 성공이다. 아직 우리에게서 통일과 일류국가로의 도약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 도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응전을 요구한다. 주변 4개국이 사안에 따라 서로 협력하거나 갈등하는 복잡한 구도가 전개되면서 이전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불투명한 미래와 대면하고 있다. 분단 상황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이익이 직접 충돌하는 각축장이 될 수도 있다.

내부적으로는 지난 반세기동안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비정상'이 사회의 각 영역에 작동하면서 사회의 결속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지역·세대·이념·계층 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정치는 국민통합이라는 제 역할을 못한지 오래다. 품격의 타락과 도덕의 해이는 공동체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진전되었지만 각 부문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지금 값비싼 대가를 치루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한국은 OECD 가입과 더불어 세계 일류국가의 대열에 합류한 것처럼 우쭐했다. 그러나 곧이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하는 경제 위기를 맞아 온 나라가 휘청거렸다. 그 후 비록 눈앞의 급한 불은 꺾었다고 하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지금까지도 위기의 적신호는 사라지지 않았다. 경제성장은 일부 대기업들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중산층은 붕괴해가고, 서민들은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양산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설계하기 어렵게 되었다. 노동시장의 과도한 유연화는 그나마 직장을 가진 사람마저도 각자의 일터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직업윤리를 발휘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위기상황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대는 정부의 모습은 정치적·형식적 민주화에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민본'통치를 구현하고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는 '정상'국가를 바로 세우는 일이 실로 요원함을 일깨워 준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국민의 의식저변에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나눌 줄 아는 따뜻한 인간적 유대 정식이 살아 있다. 그러한 윤리의식이 이성적으로 승화되어 공동체의 윤리로 성숙한다면, 우리에게 는 아직 희망이 있다. 지금 우리는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을 성취하고 진정한 일류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상시적 위기상황에 내몰려 계속 표류할 것인가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1.2 한국경제의 명암

일류국가가 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상당한 수준의 경제력과 사회적 자본이 충분히 쌓여 있어야 가능하다. 한마디로 말해 국력을 내실 있게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가 처해있는 현실을 냉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

경제부문에서 한국사회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밝은 면을 보자면, 한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명이 넘으면서도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거나 근접한 오직 7개 국가 가운데 하나다. 다른 6개국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불란서, 그리고 이태리다.

어두운 면은 저성장과 양극화다. 1980년대 8.6%, 90년대 6.7%이던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서는 4.4%로 하락하더니 10년대에는 2~3%대까지 떨어졌다. 소득분배도 점점 악화되었고, 삼성·현대·LG·SK 등 4대재벌의 1년 매출액이 GDP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재벌 의존도가 커졌다. 경제적 힘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한국을 상징하던 표현이었던 '역동적 한국'(Dynamic Korea)이 아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진다. 이대로 놔두면 경제가 쇠약해짐은 물론이요 언젠가는 사회 전체가 결속력을 잃고 견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이게 될까봐 심히 우려된다.

한국경제의 밝은 면은 더 밝게 하고 어두운 면은 덜 어둡게 해야 한다. 먼저 한국경제를 크게 성장시킨 요인부터 보자.

첫째, 교육 및 인적자원 투자에 대한 강조가 핵심적이었다. 주요 천연 자원도 축적된 자본도 없는 한국으로서는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 수준

이 높은 노동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오랜 전통이다. 우리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는 데 지극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열의가 모여서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되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발전의 두 번째 요인은 '하면 된다'는 과감한 도전정신이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한국인은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를 빈곤에서 구제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있는 곳이라면 먼 타국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일함으로써 현지 경제뿐 아니라 한국경제 또한 발전시켰다. 서독과 열사의 땅 중동에서 광부, 간호사, 건설노동자로 일하며 받은 돈으로 형제, 자매, 자식들이 공부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과감한 도전이 가능했던 것은 그런 헌신적 노력이 더 나은 미래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밝은 희망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했기에 강력한 국민적 결속력이 생겨났다. 희망을 공유하고 같이 나누며 함께 성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두운 면은 어디서 유래할까?

1960년대 초 정부 주도의 본격적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선성장·후분배에 입각한 경제성장은 경제정책의 기본 전략이었다. 수출 및 중화학공업과 같은 특정 부문을 선도부문으로 먼저 육성하고 그 성과가 경제 전체에 파급되기를 기대하는 불균형 성장전략, 이른바 낙수효과 모델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성장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지상 목표였고 분배와 형평은 부차적 고려사항이었다. 물론 이러한 불균형 성장전략은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런 건 아니다. 불균형 성장의 결과 소수 대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가 고착되었고, 국민 대다수의 고용과 소득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수직적 관계 속에 불공정 거래를 감수해야 하는 위치로 전략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의 가계부문과 기업부문이 각기 양극화의 가속적 심화를 경험하면서 분배문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회자되더니 최근에는 경제학자들이 '임금 없는 성장'의 문제를 경고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그 결과, 오늘날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부실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양대 문제로 자리 잡았다. 우리 사회에서 분배의 공정성을 개선하지 않고는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핵심적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는 가계부채가 1,100조를 넘어섰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으니 다들 허리띠를 졸라 맬 수밖에 없다. 내수가 줄어드니,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타격이 크다. 이때 수출 대기업의 뛰어난 성과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4반세기 동안 급속히 진행된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정보화, 그리고 한국사회 특유의 갑을관계 문화로 인해 국내의 산업간 연관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결과 수출과 내수 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고용과 소득을 만들어내는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국내 소비 및 투자의 위축은 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를 가져왔다. 이는 [양극화 심화 ⇒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부실 누적 ⇒ 내수 부진 ⇒ 성장 둔화 ⇒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한국경제에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의식수준은 지금까지도 지난 반세기 동안의 선성장·후분배의 관성 또는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확립된 불공정한 분배 관행과 기존 이해관계의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자이든 영세민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한국경제라는 배에 동승한 현실에서, 더 이상 실기하면 모두가 공멸이다.

21세기를 맞이한 우리 사회가 양극화의 개선 없이는 성장 둔화를 피할 길이 없다. 동반성장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II. 우리의 길은 무엇인가?: 동반성장의 원리와 시책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계적인 완전 평등은 가능하지도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하지도 않다. 즉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도 있을 것이고, 성장하는 산업이 있으면 사양산업도 있기 마련이다. 모두를 똑같이 만들 수는 없다. 문제는, 한 분야의 성장 효과가 그 분야에만 고이지 않고 다른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는 순환이다.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 부문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선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동반성장의 요체이다.

II.1 동반성장의 원리: 국민경제의 선순환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부자·대기업·성장산업 등 선도부문의 성장 효과가 아래로 잘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낙수효과(top-down track)라고 부를 수 있다. 앞서 언

급했듯이, 과거 반세기 동안 한국경제는 선성장 · 후분배의 불균형 성장전략만을 추구하다 오히려 낙수효과의 연결고리가 거의 끊어졌다. 이 끊어진 고리를 다시 이어야 한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재벌개혁이나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과 같은 경제민주화가 논의되었는데, 이러한 대책들이 바로 낙수효과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1960~70년대의 한국경제가 경험했듯이, 소수의 선도부문을 선별하여 한정된 자원을 집중 지원하고 심지어는 일정정도의 편법을 용인해주는 것이,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용 확대를 통해 다수 서민층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한국경제는 이미 그 단계를 지났다. 이제는 불법 · 편법을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동반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이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이른바 재벌개혁, 즉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 ·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시장경제 원리를 파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렇지 않다. 불법과 편법, 그리고 경제력의 남용이야말로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요소이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드는 것이 시장을 바로 세우고 동반성장을 이끌어내는 길이다.

둘째로, 하도급 중소기업 · 비정규직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분수효과(bottom-up track)라고 부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낙수효과의 정상화가 기본적인 과제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만으로 한국경제가 봉착하고 있는 양극화와 저성장의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시장이 아무리 공정하게 작동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운이 없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시행된 극도의 불균형 성장전략의 결과 구조적 장벽이 너무나 높게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다수 국민의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서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내수의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고용과 투자를 자극함으로써 성장을 가속화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와 선순환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의 보수진영에서는 낙수효과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시장만능주의를 맹신한 결과 오히려 공정한 시장경쟁을 파괴하고 기득권을 고착시키며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하는 폐단을 낳았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분수효과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반대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자칫 개인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훼손하고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면서 복지정책을 통한 사후적 분배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있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중 어느 하나의 경로(track)만으로는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결합하여 선순환의 효과를 낳아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법제도와 관행을 혁신해야 하는 지난한 과제이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다.

II.2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시책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그리고 당장 실천하기 쉬운 것으로는 우선, 초과이익공유를 꼽을 수 있다. 대기업이 목표한 것보다 높은 이익을 올리면 그것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돌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해외진출, 그리고 고용안정을 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시혜적인 것이 아니다. 보상적인 것이다. 초과이익의 적지 않은 부분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에 연유하기 때문이다.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여 대기업이 더 이상 지네발식 확장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들의 신규 참여 확대를 금지하는 업종을 선정하여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주자는 취지이다. 물론 대기업의 참여 금지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조적인 노력과 정책 지원이 결합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당장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들은 기존의 불공정한 게임을 아래에서라면 대기업으로만 흘러가 고여 있을 돈이 중소기업에 합리적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하는 조치들이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이다. 좋은 학생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학자금 융자에 혜택을 준다거

나 군복무에 혜택을 줄 수도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국가기관, 예를 들면 KOTRA가 대학, 중소기업 등과 협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R&D 자금 배분을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바꿀 필요가 있다.

II.3 노동시장 정상화와 증세

한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향상·안정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또 최저임금을 꾸준히 인상함과 동시에 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감독의 강화 등 노동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는 비정규직 등 불안정 고용계층이 아주 많다. 특히 청년층의 불안정 고용은 잦은 이직이 숙련형성을 저해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인적자본 축적에 결정적 장애가 된다. 나아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고용 관행은 나라 안에 두 개의 국민을 만드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선수범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집행하고,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 노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재정·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200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한 빈곤퇴치 및 사회통합 정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었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한계 중소기업의 고용을 줄여 오히려 저소득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지만, 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의 임금소득 증가는 내수를 자극하여 중소기업은 물론 경제 전체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실증연구 결과가 더 많다. 평균임금 또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볼 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2015년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이고, 2016년의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솔직히 너무 낮다. 5년 정도의 시한을 정해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는 영세기업에는 재정·세제상의 지원책을 동시에 시행하면 된다.

끝으로, 증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을 위해서는 물론, 동반성장 시책의 충실한 집행을 위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정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조세체계나 간접증세 기조만으로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하다. 물론 증세를 좋아할 국민은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증세를 언급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침묵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조세부담률 또는 사회보장세를 합한 국민부담률을 어느 수준으로까지 끌

어울릴지, 간접 증세와 직접 증세는 어떻게 결합할지, 보편 증세와 부자 증세의 갈등은 어떻게 조정할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세목별 구성과 세율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국민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시급히 필요하다.

Ⅱ.4 동반성장의 과실과 사회공동체 운영원리

이러한 동반성장의 원리와 시책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 성장이 촉진되고 지속적 성장의 기초가 된다. 한국경제는 인구가 5천만이 넘으면서도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거나 근접한 50-30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 국가신용도는 일본·중국에 비해 높아졌다. 그러나 투자가 부진하여 잠재성장력이 떨어졌다. 대기업은 돈은 많으나 투자대상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투자대상은 있으나 돈이 없다. 따라서 투자증진을 위해 대기업에는 첨단, 핵심기술을 많이 제공해야 한다. 그것은 중기적으로는 R&D의 방향전환, 즉 D에서 R로의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혁신을 통해 국민 전체의 창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것들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기업으로 흐를 돈이 합리적으로 중소기업에 흘러가게 하여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면 단기적 성장을 이루면서 지속 성장의 기초를 쌓을 수 있다.

둘째, 동반성장은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부자와 빈자, 강남과 강북,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으로 양극화된 사회는 경제적 효율은 물론 정치사회적 안정도 확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은 약자들의 생활을 개선함으로써 사후적 복지수요를 줄이는 사전적 복지제도의 역할도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 각 경제주체들이 상호 공존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동반성장은 영영 이상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 대기업의 선도적 변화, 중소기업의 자조가 어우러진 삼위일체가 동반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동반성장은 21세기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Zeitgeist)이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서민경제가 파탄 나고, 경제 전체가 붕괴되어 사회를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 그러나 동반성장에 성공하면 한국경제가 새로운 시대로 도약할 수 있다. 나아가 동반성장은 경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철학이자 새로운 사회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가치이다.

Ⅲ.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사회·정치 혁신

Ⅲ.1 교육혁신

과거 한국경제 고도성장의 주역은 과감한 투자로 대량육성한 산업화 맞춤형 인재들이었다. 그러나 미래를 이끌 핵심역량은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재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핵심인재들은 어떻게 육성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우수한 교육이다.

먼저 스트레스가 과중한 학생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당당한 자신감을 갖도록 심신을 단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육체적 힘을 키워야 한다. 오래전 영국에서 연구할 때 추운 겨울에 이튼 칼리지에서 학생들에게 반소매 상의와 반바지를 입혀 차가운 진흙탕에서 레슬링을 시키는 이유를 설명하던 강사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다. "이게 우리가 미래 지도자들을 기르는 방식이다. 19세기 총리들은 대부분 이튼 졸업생들이었다. 하나같이 키 크고 강한 사나이들로, 빅토리아 여왕 재위 기간에 대영제국을 건설한 주역들이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자 약해 빠진 이들이 총리로 선출돼서 대영제국은 패권을 미국에 넘겨줘야 했다." 그 강사가 농담하는 것 같기는 했지만, 그의 말 일부는 진심으로 느껴졌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우리말도 있지 않은가.

창의력은 육체적 힘만큼 또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로, 교육이 새로운 세대에 함양해야 하는 특성이다. 새롭게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을 일컫는 창의력은 특히 연구개발 부문에 필요한 것으로, 연구개발은 최첨단 투자사업의 설계 및 실행에 필수적이다.

나는 서울대학교 총장 재직 중에 학생들의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수법을 지식전달에서 지식창출로 변환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학생들이 기존의 사고방식에 도전하고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학문 과정을 재설계 했다. 이에 따라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포함해 기초과학 및 교양교육의 질을 향상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이 인종 및 민족, 성과 성차별, 탈식민주의 등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핵심과목을 개설했다.

또한 고품질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 수를 대폭 감축하여 학생 대 교수 비율을 낮췄다. 경제와 마찬가지로, 지난날 한국의 교육은 성장에 치중했다.

실제로 한국에는 현재 200개의 4년제 대학과 160개의 2년제 대학이 있으며, 대학생은 전체 인구의 4%에 달한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에 속한다. 한국의 대학교육은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성장해서 더 이상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산업처럼 되어버렸다. 교육에 필요한 개혁중 하나는 바로 대학의 숫자와 그 규모를 줄이는 일이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질 중심의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대학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창의적 사고에는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필수적이다.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경험에 익숙한 사람만이 유연하게 사고하고, 풍부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나는 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신입생의 1/3은 전국에서 골고루 선발함으로써 전체 학생이 모든 지역을 골고루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선발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학생들과 교수진 모두 보다 광범위한 간접경험을 통해 자신들을 풍요롭게 하도록 보장한다. 개개인의 창의적 사고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을 지식의 전달자로부터 지식의 창조자로 변화시키는 것은 색다르고 새로운 아이디어이며, 이것을 자극하는 것은 결국 폭넓은 간접경험이다. 대학이 지식의 창조자로 기능할 때 비로소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인재를 공급할 수 있다.

우수한 교육이란 또 낯선 상황, 나아가 위기에 적응하는 능력과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춘 미래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교육이다. 우리는 미래의 지도자들이 일찍부터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감과 융통성을 겸비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자신감과 융통성이야말로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이들이 효율적으로 성공에 도달하도록 해주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만약 학교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특성을 길러줄 만큼 양호하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어떤 지식이 가장 중요한지 묻는다면 나는 바로 '언어'라고 생각한다. 특히 모국어는 도목수가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연장통과도 같다. 언어에 대한 지식이 깊고 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명료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명료한 사고는 설득력 있는 추론을 가능케 해주며, 추론이 모여 사상체계를 형성하고, 사상체계가 모여서 마침내 하나의 문화가 형성된다. 활력 있는 문화 없이 그 어느 사회도 일류 제도를 구비하고 번창할 수 없다. 언어에 대한 숙련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학교 졸업 이후에도 평생 동안 읽고, 말하고, 써야 한다.

끝으로, 훌륭한 인재를 기르는 일은 곧 훌륭한 사람을 기르는 일임을 항 새겨야 한다. 사람답게 사는 길을 묻는 일과 유리된 지식은 한번 써먹고 마는 소모품과 다를 바 없다. 한 개인이 아무리 잘 나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필경 남에게 질시와 배척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며,

결코 어디에서도 존중받는 리더가 될 수 없다.

Ⅲ.2 사회혁신

우리 사회가 양극화의 나락으로 빠져든 이유가 단순히 경제성장 전략의 문제만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질서 자체가 서서히 붕괴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맨 밑바닥에 불의와 부정이 도사리고 있다고 본다. 세월호 사태 등 빈발하는 위기 상황을 겪으며 국민이 느꼈던 실망과 좌절, 분노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정부, 상식이 먹혀들지 않는 사회, 그리고 그 밑바닥에 끝 간 데 없이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부패의 구조였다. 돈 먹는 공무원, 돈 주는 기업인, 이권을 추구하는 정치, 기득권에 안주하는 언론계와 학계, 정의에 눈 감은 사법부, 도그마에 빠진 종교계, 그리고 영리 추구의 온상으로 변한 교육계 등이 우리 사회의 솔직한 단면이다.

부정과 부패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거대한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다. 이 구조가 “더불어 살기”보다는 “끼리끼리 살기”를 추구하고, 약자를 위해 정의를 세우기보다는 강한 자를 위해 불의에 눈감게 한다. 한 때 우리 사회의 공감대였던 “보다 나은 미래, 더 잘사는 사회”는 사라지고, “그들만의 잔치, 비상구가 없는 사회”로 변해 버리고 말았다. “할아버지가 부자인 사람”은 맞선 시장에서 환영받지만, 가진 것이 개인의 능력 하나 밖에 없는 사람은 그 능력을 펼칠 기회도 점점 줄어드는 사회가 되었다.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있다. 결혼도, 취업도 할 수 없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현실에 절망하고 있다. 그들이 좌절하고 병들어갈 때, 우리 사회의 미래도 함께 병들고 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부정과 부패의 구조를 깨야 한다. 부정과 부패의 구조는 우리 사회의 곳곳에 뿌리를 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부패하면 가장 먼저 정치권을 떠올린다. 그런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부패의 문제에 과연 정치권이 가장 선두에 있는지는 의문이다. 나는 오히려 정치권의 부패를 거론하는 것이 다른 부문의 부패를 은폐하는 수단이 될까 염려스럽다.

교육계나 법조계는 부정부패로부터 진정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많은 사학재단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장수하고 있고, 몇몇 대형로펌은 재벌 못지않은 권력과 부를 축적한 지 오래다.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이어야 할 교육현장은 가장 권위적이며 위선적이기까지 하다. 판사와 검사들이 퇴직 후 대형로펌에 들어가면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몇 십억 원의 돈을

번다. 여기에 개혁의 칼날을 세웠던 정권은 모두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공무원들이 수많은 산하단체를 관리하면서 현직에 있을 때는 이권을 챙겨 주고, 퇴직하면 그것을 향유하는 구조가 이제 너무나 만연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좋을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반복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난은 우연히 그 빙산의 일각을 보여 주었을 뿐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가셨다. 그리고 그 분은 화해와 평화가 “정의의 결과”임을 분명히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 부정과 부패의 구조가 일소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다.